

‘일자리 중심 경제’인가 ‘공유부 분배 정치’인가?

—“가계 가처분소득 중심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1.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말하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하여

지난 7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저성장 고착화·양극화 심화”를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로 보고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한다. 정부가 기존 패러다임의 문제점인 “가계-기업 불균형”,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확대”, “내수·수출 불균형”을 해소할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1)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활용”하는 “소득 주도 성장”, 2)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복원”을 통한 “일자리 중심 경제”, 3) “경제주체간 합리적 보상체계 정립”이라는 “공정 경제”, 4) “생산성 증

심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3% 성장능력”을 갖추는 “혁신 성장”의 네 가지다.

정부가 추진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소득 주도 성장”이다. 이전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이 공급 중심 성장 정책으로 투자의 주체인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었다면, “소득 주도 성장”은 가계 가처분소득의 증대를 통해 소비를 늘리고 투자를 자연스럽게 증대시킨다는 수요 중심 성장 정책이다. 이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가히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낡은 경제 패러다임으로 인해 한국 경제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이 유효한 대안인지는 또 다른 문제다. 수요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시대착오적인 낡은 패러다임을 닮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소득 주도 성장”의 수단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임금 기금의 확대, 공공서비스 확충을 통한 생계비 절감, 공적 이전소득 확대의 세 가지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도 세 가지 수단을 열거한다. 1) “최저임금 시급 1만원”, 2) “주거비 · 의료비 · 교통비 · 통신비 · 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절감”, 3) EITC 확대, 아동수당 월 10만원, 구직촉진수당, 기초연금 인상, 치매 국가책임제, 장애인연금 인상, 공익형 직불제 확대 · 개편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와 3)은 조세정책의 재설계와 확장적 재정정책을 필요로 한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2)와 3)을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획기적인 조세체제 전환이 아니라 고소득층에 대한 ‘편셋 증세’만을 꾀하고 있

기에 2)와 3)의 재정 규모는 OECD 평균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과 비교하여 크게 못 미칠 것이다. 또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지급액 수준으로 볼 때, 2)와 3)은 가계 가처분소득의 획기적인 증대라는 결과를 만들기에는 매우 부족한 규모다.

이와 같은 한계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성과 관련된다. “소득 주도 성장”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임금 주도 성장wage-led growth”의 한국적 변형이다. 2012년 ILO의 라보이에Marc Lavoie와 스톡햄머Engelbert Stockhammer는 친노동적 분배를 기조로 하는 사회정책과 임금정책을 결합한 임금 주도 성장을 주장했다(“Wage led growth: Concept, theories and policies”, 2012). 이윤 주도 성장의 두 가지 형태인 선진국의 부채 의존 성장과 신흥국의 수출 주도 성장이 2008년 이후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에 근거해 있는 임금 주도 성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격차를 줄이고 노조 관련 법률의 개선과 단체협약 적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노조 교섭력을 강화하여 임금 기금을 확대하며 GDP에서 차지하는 노동소득 비중을 높이고, 2) 이와 같은 노동정책과 병용하여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2차 분배를 통해 세후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리며, 3) 그동안 이윤/부채 주도 성장을 낳은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를 통해 안정적인 소비-투자-고용의 선순환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임금 주도 성장이 가능하려면, 1) 취업률의 증대와 낮은 실업률, 2) 고용 유발 효과가 미미한 금융자본 및 지식자본에 대한 과세와 공적 이전소득의 결합이 전제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의지의 문제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의 문제다. 임금 주도 성장은 완전고용 경제를 전제할 경우에만 가능한 패러

다임이다. 임금 주도 성장은 일자리 중심의 패러다임이며 공적 이전소득은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공적 이전소득이 단지 보조적인 역할을 벗어나 큰 역할을 맡게 될 때는 “임금 주도 성장”이라기보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문재인 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은 공적 이전소득의 확대를 포함하고 있지만 조세개혁의 불철저성으로 그 규모가 OECD 주요국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친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가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의 수단으로 공적 이전소득을 주된 요소로 배치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책 요소들의 경중을 감안하여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소득 주도 성장”을 내걸고 있지만 오히려 전통적인 맥락의 “임금 주도 성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임금 주도 성장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용의 문제를 비켜갈 수 없다. 완전고용 경제를 회복할 수 없다면 임금 기금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

현 상황에서 완전고용이 가능하지 않다면 임금 기금 확대에만 의존하지 않는 별도의 소득 기반 확충 정책, 즉 광범위한 공적 이전소득의 도입이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개혁도 필요할 것이다. 임금 주도 성장도 사회보장제도의 강화를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거론하지만, 종래의 복지국가가 사회보험을 중심축으로 하고 완전고용을 전제한 모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복지국가 모델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현재의 불안정노동체제에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일자리 여부와 무관한 보편적 공공서비스와 공적 이전소득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공적 이전소득 확대와 공공서비스 강화라는 길과 완전고용 근접 전략이라는 또 다른 길 중

에서 두 번째 길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 “일자리 중심 경제”가 바로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서비스나 공적 이전소득과 관련해서는 증세에 대해 소극적이며 예산 제약선을 설정하지만,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부투자와 지출, 민간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연간 34만 개라는 일자리 목표치 달성에 국가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일자리 창출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 버렸다. ILO의 임금 주도 성장론은 현 상태가 마치 완전고용 경제인 것처럼 전제해 버렸던 반면에 “일자리 중심 경제”는 임금 주도 성장이 가능한 조건을 창출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떻게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것일까? 또한 어떤 방식으로 일자리의 확대가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증대이고 노동소득 점유의 증대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인가?

문제는 그저 일자리가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다.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노동소득분배율이 올라간다. 그렇다면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 중심 경제”는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가? “일자리 중심 경제”는 “가계소득의 핵심인 일자리의 양적 확충·질적 제고를 통해 ‘일자리-분배-성장’의 국민경제 선순환 구조 복원”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비정규직 감축 등 일자리의 질의 제고는 의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괜찮은 일자리의 양적 확충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 정부가 제시한 방법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공공 일자리의 확대다. 둘째는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의 실근로시간의 단축, 셋째는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 등 고용 중심으로의 세제 개편, 넷째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대해서는 따로 논할 필요

가 없을 것 같다. 익히 알려진 시책들이며 그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장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돕거나 일자리 매칭이 잘 되도록 돕는 정책만으로는 지금까지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했다. 그렇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에 기대되는 효과는 어떨까? 공공 일자리 확대는 분명 고용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고 임금 기금을 확대시킬 것이다. 특히 현재 사영화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공공화하는 것은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경제적 처지를 호전시킬 것이다. 하지만 약간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안전, 치안, 복지, 교육 분야 공무원 일자리 이외에 괜찮은 일자리 총량이 크게 늘어날 시책은 아니다. 국가를 최종 고용자 employer of last resort로 전제하는 일자리 보장 job guarantee은 일찍이 민스키H. Minsky가 주장한 이래로 임금 보조금이나 고용 보조금 등 이런저런 정책을 통해 도입되었지만 지금까지 큰 성공을 거둔 적이 없다. 고용의 질이 제고되는 것은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것이고 “소득 주도 성장”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괜찮은 일자리 증대로 완전고용에 근접하지 않는다면, 일자리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은 불가능하다. 그래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 중에서 공공 일자리 정책은 그나마 부분적인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하지만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의 실근로시간 단축이 과연 얼마만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스럽다. 주당 35시간제 정도의 획기적인 실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면 신규 고용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단축된 노동시간은 자동화와 노동강도 강화로 잠식될 것이다. 1990년대 말 프랑스의 오브리법loi de Aubry 실험은 대략 절반 정도의 노동시간량이 자동화로 잠식되고 추가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일자리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이와 같은 자동화 추세보다 더 큰 폭의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점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며 일자리의 질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의 가계소득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동 여부와 무관한 공적 이전소득을 확대해야만 한다. 공적 이전소득 문제와 증세에 대해 소극적인 문재인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일자리 정책으로서 명백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과감한 증세를 통해 공적 이전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한, 일자리 공유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할수록 고용된 노동자의 가계소득이 축소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5명이 고용된 상태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7명이 고용된 상태로 바뀐다 하더라도, 노동시간 단축으로 개별 노동자의 임금소득이 줄어들어서 임금 기금의 규모가 동일하다면 임금-소비-투자의 선순환, 곧 수요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은 불가능하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말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세 번째 축인 “공정 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의 조정과 대기업 지배 구조의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반성장”, “협력성장”, “포용성장”을 가치로 내건 “공정 경제”는 경제민주화 담론의 틀에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일자리 중심 경제”의 틀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 일자리의 89%를 중소기업이 창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완화하고 동반성장 모델을 확립하지 못한다면 일자리의 양적 확대나 질적 제고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공정 경제” 패러다임 속에서 정책 과제로 제시했지만 이 역시 “일자리 중심 경제”를 뒷받침하는 정책 수단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공정 경제” 수립에 의해 얼마만큼 중소기업의 고용 여력이 늘어날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말하는 패러다임 전환에서 유의미한 지점은 최저임금 인상과 “공정 경제”의 두 축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고용 효과는 별도로 하더라도, “공정 경제”는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고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가계소득 기반을 확충하여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낳을 수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정책의 결합만으로 부채 의존 소비 기반에서 벗어나서 가계 가처분소득에 입각한 소비로 바뀌고 경제가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중에서 가장 유의미한 내용임에는 틀림없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말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네 번째 요소는 “혁신 성장”이다. 전통적 요소 투입에 의존하는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서 총요소생산성TFP이 높은 “생산성 중심 경제”를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혁신 성장”에는 “경제·산업 등 전 영역에 걸쳐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 강화”라는 항목이 들어 있다.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생산성 중심 경제의 주역으로 중소기업을 설정하고 정책 과제의 중심에 둬으로써 “일자리 중심 경제”와 정책적 조응 관계에 있도록 배치되어 있다.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는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목표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4차 산업혁명 과정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추진된다고 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어떤 보장도 없다. 4차 산업혁명이 가뜩이나 부족한 일자리를 더 줄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 지식자산 생산 비중의 증대와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세적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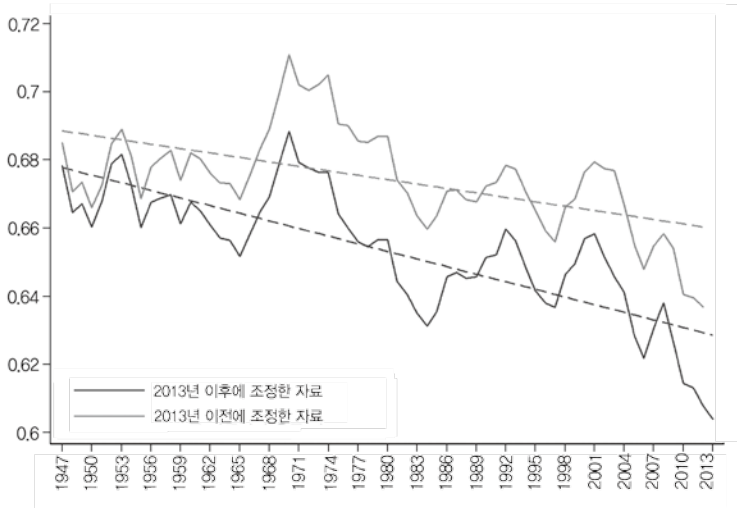
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의 주요 내용을 살폈다. 아래에서는 “임금 주도 성장”이나 “일자리 중심 경제”가 아닌 또 다른 패러다임은 무엇인지 살필 차례다. 하지만 그 이전에 임금 주도 성장의 제약 조건이 무엇인지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다. 다음 쪽 위의 그래프를 보면, 미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71년 이후로 하락 추세다.* 다음 쪽 아래 그래프를 보면,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대략 10% 정도 낮지만 시계열로 보면 1996년 이전에는 상승 추세였고 1998년 이후에는 하락 추세이거나 정체하고 있다. GDP에서 임금소득이 차지하는 몫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윤 주도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임금 주도 성장을 하려면 노동소득분배율을 올려야 한다. 실업률이 높고 불안정노동이 만연한 상태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올라갈 수가 없다. 심각한 임금격차가 존재할 때 임금수준은 정체되고 임금 기금 규모는 줄어든다. 고용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가 모두 임금 주도 성장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관건 요소인 것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세적 하락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할 것이다. 불안정노동의 확산도 임금 교섭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키는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노동시장 내부의 문제로만 돌릴 수는 없다. 미국의 노동소득의 GDP 점유율을 분석한 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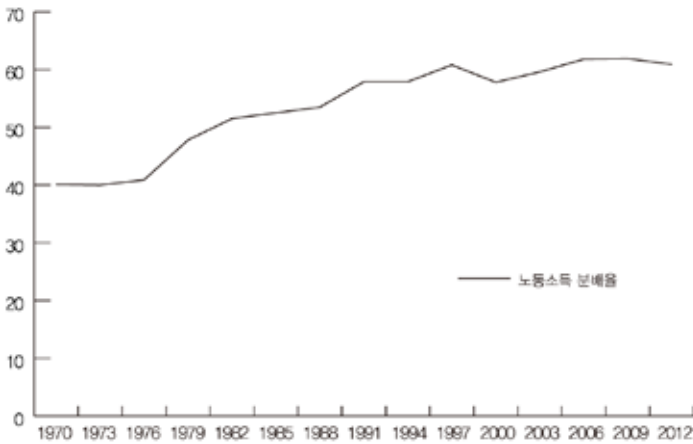
* “The Labour Share in G20 Economies”, Report prepared for the G20 Employment Working Group, 26~27, February 2015.

〈미국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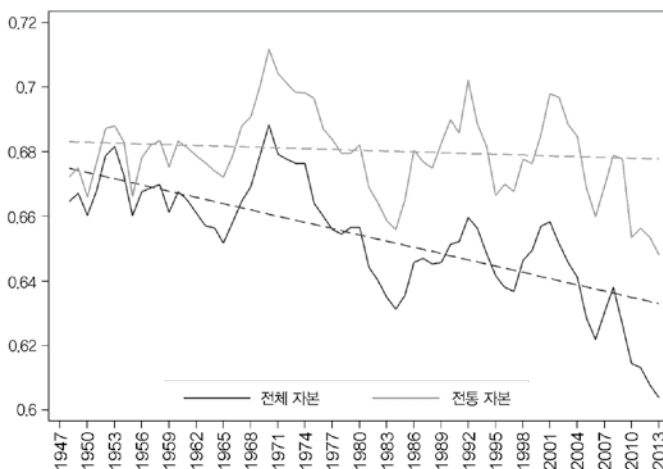
출처: <http://r-santaaulalia.net/pdfs/IPP-and-USLaborShare-short.pdf>.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출처: 한국은행

〈IPP 자본이 노동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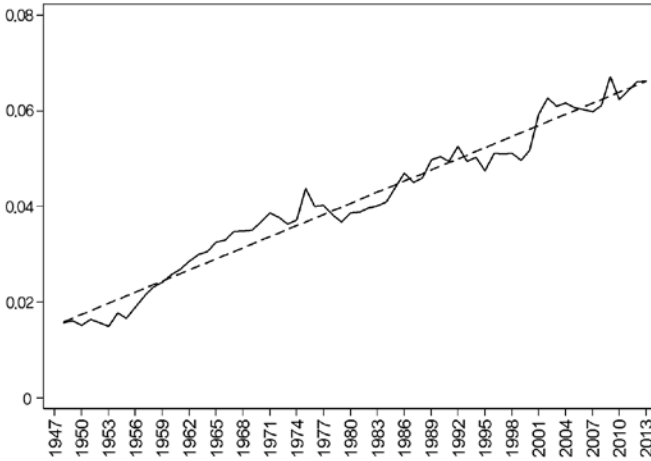
출처: <http://r-santaeulalia.net/pdfs/IPP-and-USLaborShare-short.pdf>

문은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한 원인이 전통적 자본의 착취를 강화하기 보다는 고용과 연관되지 않은 금융자산소득이나 지식자산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임을 보여 준다.* 위 그래프를 보면, 미국의 경우 GDP 대비 지식자산 생산 Intellectual Property Products(IPP)의 비중 증가와 노동소득 점유 Labor share의 하락의 상관관계는 분명히 나타난다.

아래의 선은 IPP를 포함한 전체 생산에서의 노동소득분배율이며, 위의 선은 IPP를 제외한 전통 자본 부문의 생산에서의 노동소득분배율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의 경향적 하락은 양쪽 모두에서 나타나지만 IPP를 합산한 전체 생산에서의 노동소득분배율은 IPP를 제외한 생산에서

* Dongya Koh/Raül Santaeulàlia-Llopis/Yu Zheng, "Labor Share Decline and Intellectual Property Products Capital", No 927, Working Papers from Barcelona Graduate School of Economics. (<http://r-santaeulalia.net/pdfs/IPP-and-USLaborShare-short.pdf>.)

〈미국의 IPP 자본소득분배율 추세: 1947-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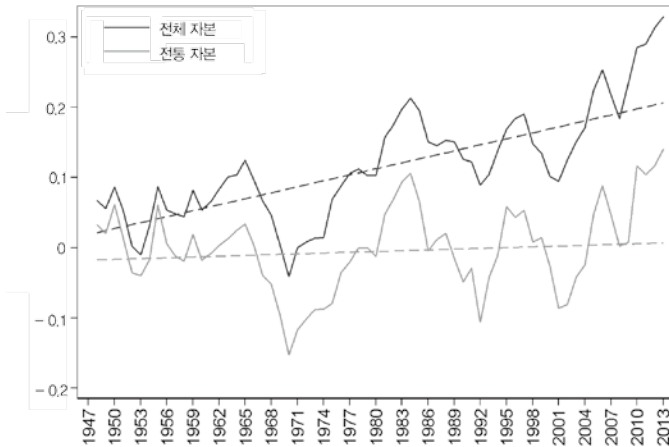


출처: <http://r-santaeulalia.net/pdfs/IPP-and-USLaborShare-short.pdf>

의 노동소득분배율보다 대략 3% 정도가 낮다. IPP를 제외한 생산에서도 1971년과 그 이후를 비교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관찰되는 만큼,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의 원인을 전적으로 IPP에서의 소득분배율 상승에 돌릴 수는 없지만, 1956년과 그 이후, 그리고 1971년과 그 이후를 비교하면 노동소득분배는 IPP를 포함할 때와 제외할 때의 격차가 1947년 이후 매년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IPP에서 자본소득분배율은 1947년 이후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고(1.8%에서 6.5%가량으로 증가), 이는 임금으로 분해되지 않는 자본소득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뜻이다.

다음 쪽의 그림은 자본소득 대 노동소득 점유율의 비교를 나타내는데, 아래의 선이 보여 주듯이 IPP를 제외하고 비교하면 점유율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에 IPP를 포함하여 비교하면 위의 선이 보여 주듯

〈자본소득분배율 대 노동소득분배율의 비율 변화: 미국〉



출처: <http://r-santaaulalia.net/pdfs/IPP-and-USLaborShare-short.pdf>

노동소득에 대한 자본소득 점유율의 추세적 증가가 관찰된다.

3. 공유부 배당: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분배하라 *sum cuique tribuere*

전통 산업에서는 고용 유발 효과도 날로 떨어지고 있지만, 금융업이나 디지털 자본과 비교할 때 전통 산업 생산은 임금으로 분해되는 몫이 훨씬 크다. 더 큰 문제는 금융업이나 디지털 자본의 수익은 성과에 따른 분배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이다. ICT 자본이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할지라도 알고리즘이 구동되기 위한 빅데이터는 사회 전체의 데이터 노동, 즉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노동을 통하여 생성된다. ICT혁명과 자동화에 반대하는 네오 러다이트 *Neo-Luddite*가 대안이 될 수 없다면, 대안은 지식, 금융, 토지, 생태 환경 등 사회 공통의 자산에 의거할 수

익을 전체 사회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공유부^{共有富} 분배 정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전통적 복지국가에서는 공핍, 출산, 장애, 구직 실패 등으로 국가의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정책적 필요에 따라 심사하여 지급하던 공적 이전소득을 전체 사회구성원에게 확대할 경우에만 모두의 것인 사회 공통의 자산을 모두에게 분배하는 ‘응분의 원리^{suum cuique tribuere}’^{*}가 확립될 것이다.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분배하고 모두의 것은 모두에게 되돌려주는 ‘응분의 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회공통자본”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지식, 금융, 생태 환경, 토지 등의 원천적 소유권을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국가재정과 구분되는 별도의 계정(가칭 ‘사회계정’)으로 관리하고 원천적 소유권자인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배분하는 공유부 배당 방식이 원칙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더라도 실현 형태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첫째는 소유, 운영, 분배의 전 영역에 걸쳐 공유부 민주주의와 공유부 배당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즉 원천적 소유권자인 모든 시민이 1인 1표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공유부 민주주의에 의해 사회공통자본이 운영되고, 사회계정에 채워진 수익은 전 사회구성원에게 동일한 액수로 분배되는 방식이다. 둘째는 사회공통자본의 개념을 전제하고 디지털 기업 등에게 일종의 공유지 임차인과 비슷한 지위를 부여하여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일찍이 토

* ‘응분의 원리’는 가장 오래된 정의 개념으로서 이미 유스티아누스 법전에서 정의의 3대 원리 중 하나로 등장한다. “*iuris praecepta sunt haec: honeste vivere, alterum non laedere, suum cuique tribuere.*” (Inst. 1,1,3~4)

머스 스펜스(Thomas Spence(1750~1814)가 토지에 대해 적용한 바 있다. 스펜스는 모든 토지를 공동체의 소유로 되돌리되 공동소유나 공동경영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두어 사인에게 임대하고 사용료를 걷어서 공무원 월급, 공공서비스,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자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할 때 사회계정에 들어오는 수익은 일종의 빅데이터 사용료로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분배된다. 세 번째 방식은 사회공통자본의 개념을 전제하더라도 디지털 자본을 일반적인 사적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현재의 자본주의에서 금융자산소득은 과세를 통해 일부 환수되지만 지식자산소득은 과세를 통해서 거의 환수되지 않는다. 전 세계적 규모의 데이터 노동에 기반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은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지역에 서버를 두고 오직 그곳에만 세금을 내면 그만이다.** 현재 조세체계에서 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며 세후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를 줄이는 기능을 하는 공적 이전소득의 재원에는 지식자산소득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진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가계 가처분소득 중심 경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대기

* T. Spence, “The Rights of Infants” (1797), in: H. T. Dickinson (ed.), The Political Works of Thomas Spence, Newcastle 1982.

** 최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당국은 각국에 서버를 안 두고 세금을 안 내는 구글을 압박하여 ‘밀린 세금’을 받아내고 있다. OECD는 소위 ‘구글세’로 불리는 소득 이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2018년부터 구글 같은 다국적기업은 매출 정보 등이 담긴 보고서를 국가별로 제출하고 각국이 공유를 한 후 과세 접근법을 따져 가겠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최근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은 디지털 자본에 대한 과세 논의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 경제” 등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임금으로 분해되지 않는 자본소득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 GDP에서 고용 없는 자산소득 분배(금융 + 지식자산소득)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세와 배당을 결합한 공적 이전소득의 확대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교섭력 강화로 임금 기금을 확대한다고 해도, 이는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자본 분과의 자본소득분배율이 줄어든다는 의미만을 가진다. 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노동소득분배율이 7~10% 정도 낮은 한국에서는 이러한 조치도 철저히 시행된다면 큰 의미를 가지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지식자산소득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효과가 반감될 것이다. 고용 없는 자산소득분배가 확대되면 임금 교섭력은 이전보다 더 취약해질 것이고 불안정노동이 확대될 것이다. “일자리 중심 경제”는 괜찮은 일자리를 늘려서 가계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자리 창출의 정책 수단은 대단히 제한적이다. 공공 일자리 확대는 고용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나 사영화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구축 효과로 고용량 증대는 기대에 못 미칠 것이다. 주당 52시간 상한으로의 실노동시간 단축도 획기적인 규모가 아니기에 고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며, 또한 공적 이전소득 확대를 통한 소득 보전 정책과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 기금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경제정책의 목표부터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다. 수요 중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유의미하지만 굳이 3% 성장을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는 의문이다.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가계 가처분소득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물적 생산의 설비투자를 통해 확대재생산을 하던 시대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지나갔다. 지금까

지의 성장 방식의 생태적 한계는 날로 분명해지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저성장의 불가피성을 인식한다면 성장 패러다임을 과감히 버릴 필요도 있다. 즉 정책목표를 “소득 주도 성장”에서 “가계 가치분소득 중심 경제”로 바뀌어야 한다.

“가계 가치분소득 중심 경제”의 주된 내용은 공적 이전소득을 확대하여 임금 기금의 확대를 유도하고, 가계 가치분소득에 근거한 소비 기반을 만들어 경제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다. 사회공통자본의 수익을 모두에게 평등하게 돌려주는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사회정책적 필요에 따른 사회수당은 “가계 가치분소득 중심 경제”에서 핵심적 요소이다. 이와 같은 공적 이전소득은 노동시간 단축을 가능하게 해 주며, 그 결과 일자리의 공유가 가능하게 될 때 임금 기금의 확대도 가능해진다. 이처럼 분배의 더 많은 평등이 이루어질 때 경제 전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 규모를 키우는 무분별한 성장주의의 덫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물론 공적 이전소득의 확대가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금융 규제와 가계부채 축소 등 금융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공적 이전소득의 확대는 고용 없는 자본으로부터 전 국민으로의 소득 이전이며, 토지, 금융, 지식, 생태 환경 등 공유부의 평등한 배당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는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지 노동 성과에 따른 분배 원칙의 훼손이 아니다. 지식 공통 자산 인클로저의 시대에는 오직 공유부 분배 정치를 통해서만 전체적인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세적 하락을 막을 수 있다. 공적 이전소득에 기초한 “가계 가치분소득 중심 경제”, 달리 말하자면 “공적 이전소득 중심 경제”는 지식 공통 자산 인클로저에 대항하는 공유부 배당 운동일 뿐만 아니라 노동 절감 기술의 발전에 조응하는 새로운 노동 정치라고도 말할 수 있다. 시대